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특수주의와 투명성의 영향

The Influence of Particularism and Transparency on National Corruption Level: A Cross-Country Analysis

박 흥 식(Heungsik Park)*

ABSTRACT

While previous studies have largely focused on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that affect the level of national corruption, the effects of particularism as a social cultural variable and the transparency of the public sector have yet to be explored. This paper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ticularism and transparency on the level of corruption. The hypothetical statements that higher particularism and lower transparency are likely to increase a nation's corruption level were tested statistically using secondary data from 37 countries. The results partially confirmed the hypotheses and revealed that particularism didn't have a significant effect but the effect of transparency level was significant. GDP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level of corruption, followed by transparency while the effect of democracy level was not significant. Despite increasing governmental concerns over how to reduce the level of corruption, few systematic studies have been undertaken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e present study treated particularism and transparency as independent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corruption, whereas previous literature on corruption ignored their effects. In this respect, this study can help to enrich our understanding of the influences of factors such as cultural differences and transparency on the level of corruption.

Key words: 국가 부패 수준(Level of national corruption), 특수주의(particularism), 투명성(transparency)

1. 서론

Trompenaars (1994, 1997, 2003), Trompenaars and Hampden-Turner (1998, 2010)는 보편-특수주의(UNPA)를 각국 간 문화적 차이를 판별하는 하나의 차원으로 제시하고, 딜레마를 이용하여 국가별 수준을 측정하는 바 있다. Trompenaars (1997: 84)는 특수주의(particularism)를 '관계' 중심 사회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법률이나 규칙보다는 자신이나 가족과 특수한 관계, 상황, 사정 등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지향성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사회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가 여부를 보편적 가치보다 우위에 둔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연구자들은 그 동안 연고주의를 부패 유발의 1차적 요인으로 지목해 왔다(조은경·이정주, 2006: 491; 권오성, 2005; 전수일, 2004). 조은경·이정주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2006: 492), 이종한 (1994: 83) 등은 연고주의를 가리켜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출신 성분으로 맺어진 특별한 친분 관계로, ‘특수적, 귀속적’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한승완 (2004: 97)은 연고주의를 ‘관계’의 문화에 기초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연고(緣故)를 ‘특수주의적 관계’로 풀이한다. 이러한 점에서, Trompenaars의 특수주의는 ‘연고적 관계와 이것이 만들어내는 특징적 태도’를 가리키는 용어라 할만하다. 연고주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집단, 즉 내집단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것이 없는 외집단은 차별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것이 공공부문에 작동되면, 공직자가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는’, 즉 법과 규정보다 자신의 특수한 관계와 이익을 앞세운 공직 사유화로 나타난다. 공직부패가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연고주의는 전형적 부패 유발 요인이다(조은경·이정주, 2006: 493; 이훈구, 2003; 한국행정학회, 1999). 지금까지 연고주의가 부패 원인이라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조은경·이정주, 2006: 492). 하지만 Trompenaars의 각국 보편-특수주의 지수는 연고주의 부패 효과의 측정을 허용한다.

한편, 각국 정부는 국가 부패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공직사회 투명성 개선 전략을 채택한다. 이것은 각국의 국가 경쟁력 개선을 위한 노력과 맞물려 오늘날은 거의 공통적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패 수준을 개선하는데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과연 얼마나 기여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각국의 국가 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 향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Institu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이하 IMD), World Economic Forum(이하 WEF) 등이 국가 경쟁력 지수를 작성해 발표한다. 국가 경쟁력 지수는 공공부문 투명성을 하위 지표로 사용하고 있어, 이 지표를 사용하면 각국 정부의 투명성 개선 노력이 국가 부패 수준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수주의와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국가 부패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들의 영향은 기존 부패 연구들이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주요 영향 요인으로 다루었던 민주주의와 경제의 발전과 같은 정치, 경제적 변수들의 효과와 비교해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다. 첫째, 한국에서 연구자들이 연고주의를 부패의 1차적 유발 요인으로 지목하면서도 사실 그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었으나, 이 연구는 특수주의 개념을 사용 연고주의의 부패 유발 효과의 측정을 시도하였다. 둘째, 한국을 포함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투명성 향상 노력의 국가 부패 수준의 개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 부패 수준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정책수단의 선택 등에 기여가 기대된다. 셋째, 기존 부패 연구가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정치, 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면, 이 연구는 문화적 차이, 공공부문 투명성의 반부패 효과에 대한 것으로, 부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II. 국가 부패 수준과 영향 요인

1. 국가 부패 수준과 거시적 변수의 영향

국가 부패 수준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부류이다. 하나는 국가 부패 수준의 영향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원인 변수들에 대한 것들이다. 경제학 분야 연구들은 주로 부패가 주는 영향, 즉 경제성장 방해 효과를 분석하였다(예, De La Croix & Delavallade, 2011; de Vaal & Ebben, 2011 등). 이들은 “한 국가의 부패가 어떻게 성장[이나], 투자와 같은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주로 부패의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였고(황진영·강동관, 2007: 2), 부패가 투자 왜곡이나 하락을 초래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Mauro (1995, 1998)은 부패가 국내 총생산 대비 투자율을 떨어뜨려 경제 성장에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기술한다. 부패가 경제의 불확실성과 비용 증대를 초래해 투자 위험을 증가시키고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가 부패 수준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은 민주주의, GDP 등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들의 부패에 대한 영향을 설명한다. Shen and Williamson (2005)은 91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엇이 국가 부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후, 민주주의, 경제의 개방성 등과 같은 구조적 원인들(structural causes)이 인지된 부패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민주주의를 정치적 권리, 시민과 언론의 자유로 측정된 분석에서, 낮은 민주주의 수준이 부패를 더 악화시키는 효과를 발견하였다. Hill (2003)은 미국 주 정부 정치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민주화와 부패 수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민주화(democratization) 수준이 높을수록 부패는 더 적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그의 연구에서 민주주의 수준은 민주적 절차, 법치주의에 대한 것이었다. 국민 1인당 GDP의 부패 수준에 대한 영향은 부정적 관계로, GDP가 클수록 부패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upta, Davoodi, & Alonso-Terme, 2002). 예를 들어, Pazmandy (2011)는 자신의 연구에서 사회 경제적 요인(socioeconomic factors) 중 GDP의 부패 인식도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고 보고한다. 최근 연구들은 국가 부패 수준 영향 요인을 민영화, 인터넷, 전자정부, 거버넌스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Arikan, 2008; Andersen et al., 2011; Kovacic, 2005; Huss et al., 2010 등)

국가의 높은 부패 수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그러한 부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선행 연구들은 GDP를 결과와 원인 변수로 함께 사용한다. 즉 GDP는 결과 변수로 부패가 많으면 경제 발전의 속도를 떨어뜨

리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 국가의 높은 부패 수준은 GDP를 감소시킨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들은 GDP가 원인 변수로, 높은 GDP는 부패 수준을 개선하는, 즉 부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후진국들은 부패의 효과적 통제를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하다. 따라서 부패 문제를 좀처럼 잘 극복하지 못한다. 이것은 다시 국가 전반에 걸쳐 부패의 부정적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논리이다. 예를 들어, Gupta, Davoodi, and Alonso-Terme (2002)은 경제적 어려움(economic adversity)과 같은 조건들은 부패를 증가시키고, 이것은 다시 경제발전을 방해한다는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2. 문화 - 특수주의

각국의 문화적 태도와 부패 수준 간 관계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 자체가 Hofstede (1984), Trompenaars (1994) 정도이다. Hofstede (1984: 39)은 다국적 기업 HERMES을 대상으로, 1967-1973년에 걸쳐 66개국으로부터 20개국 언어로 번역된 117,000매 설문지 조사(international attitude survey)를 통해 문화차원이론(cultural dimensions theory)을 발표했다. 초기 권력 거리(power distance, PDI), 개인주의(individualism, IDV),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UAI), 남성성(masculinity, MAS), 4 가지 차원을 확인하고, 90년대 이후 두 가지 차원, 장기적 지향성(long term orientation, LTO), 행동의 자유 대 절제(indulgence versus restraint)를 추가하여 여섯 가지 차원으로 이론화하고 각국 간의 차이를 설문지로 조사, 발표하였다. Trompenaars (1997: 101)는 보편 대 특수주의(universalism vs. particularism), 개인 대 집단주의(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감정 대 중립적 태도(affective vs neutral), 성취와 귀속(achievement vs. ascription), 한정 대 확산(specific vs. diffuse), 연속적 대 동시적 시간 인식(sequential vs. synchronic time perception), 외부 대 내부 지향성(outer directness vs. inner-directness)의 7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

문화적 태도와 부패와의 관계에 대하여, Hofstede and Hofstede (2005)는 권력 거리가 먼,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큰 사회일수록 부패가 더 많다고 설명한다. Trompenaars (1994, 1997)는 보편-특수주의는 룰(rule)과 규정 준수 태도에 관한 것으로, 보편주의자는 규칙의 준수를 특별한 관계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보편주의의 규정 중심적 사회에서는 특정 상황, 조건보다는 룰을 우선시킨다. 룰은 한 사회가 설정하고 있는 행동 방식으로, 모든 상황,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고, 개인의 감정,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반면 특수주의는 규정보다 관계를 중시해 친분 관계를 개입시킨다. 상대가 가족, 친구, 소속 집단의 사람일 때 이들을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과 차별하고, 똑 같은 행위라도 환경, 상황, 관계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다.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규칙과 관계없이 더 중요하고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Trompenaars (1997: 69)는 北美人과 유럽인들은 보편주의에 속한다고 말한다. Trompenaars (2003: 2-3)는 보편-특수주의 태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인들은 보편주의적 태도를 보이거나 아시아, 남미 사람들은 윤리적 기준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친구를 돕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Trompenaars and Hampden-Turner (2010: 104)는 이러한 문화적 태도의 차이를 근거로, '부패(corrupt)'를 특수주의 사회의 폐해로 꼽는다.

조은경·이정주 (2006)과 Getz & Volkema (2001)은 드물지만 문화가 부패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경우이다. 이들은 권력 거리(power distance)와 불확실성 회피가 부패와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조은경·이정주 (2006: 491)는 Hofstede의 문화적 지향성 분류 가운데 권력 거리, 집단주의, 불확실성 회피 등을 부패 유발 특성으로 간주하고, 이들과 각국 부패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권력 거리가 멀고, 집단주의가 강하며, 불확실성 회피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패한 것으로 나타나, 연고주의 문화가 부패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말한다. Getz & Volkema (2001)는 경제적인 공직 조건을 국민 1인당 GDP로, 부패 수준은 글로벌 NGO 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이하 CPI)를 사용한 분석에서, 경제적 곤란은 부패를 촉진하고, 불확실성의 회피(uncertainty avoidance)는 둘 사이에서 조절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권력 거리(power distance)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클수록 부패의 수준도 높았다.

3. 투명성

선행연구에서 투명성의 부패 통제 효과는 긍정적이다. 예를 들어, Zhao, Kim and Du (2003)은 국가 부패 수준과 투자 유치와의 관계 연구에서 투명하지 않을 때 부패를 저질러도 적발이 힘들고, 일반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도 적으며 처벌에 대한 압력도 없어, 결국 부패가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각국은 공공부문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에서 부패 저감 효과를 그 이유의 하나로 설명한다(Steirnsstein, 2011; Lindstedt & Naurin, 2010; Kim, Kim, & Lee, 2009). TI는 공공부문 투명성 개선이 부패 통제에 효과적이라는 인식 하에, 반부패 활동의 하나로 각국의 투명성 수준을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지난 몇 년에 걸쳐 공공기관 외부 청렴도 측정 영역에 투명성 지수를 포함시켜 측정하고 결과를 언론에 보도 자료로 제공하거나 기관평가에 반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11: 223). IMD는 총 58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 지수를 산출해,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발표하면서, 300개 지표 항목을 사용하는데, 투명성 지표가 그 중 하나이다. WEF도 국가경쟁력 평가에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정부 정책결정에서의 투명성으로 정의한 후, 지수를 집계

한다. 이것은 높은 투명성은 정부 업무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공직자의 자유재량을 제한한다. 또 외부의 충분한 감시가 가능해 부패 범죄의 유혹은 줄어듦, 부패의 적발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시킨다. 따라서 높은 투명성은 결국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4. 가설의 설정

이 연구의 관심은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특수주의와 공직사회 투명성의 영향에 대한 것이다. Trompenaars and Hampden-Turner (2010: 104)는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룰(rules)과 시스템에 기초한 행동이나 관료적(bureaucratic), 경직적(rigid), 비인간적(impersonal) 병폐가 있는 반면 특수주의(particularism)는 관계 중심의 행동으로, 부패(corrupt), 혼란(chaotic), 결탁(conspiratorial)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한다. 투명성의 반부패 효과와 관련해, 선행연구(예, Kaufmann & Bellver, 2005 등), 반부패 NGO,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부패의 관계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은 이를 반영한 가설이다.

가설1 (H1) : 특수주의 정도가 높을수록 국가 수준에서의 부패는 증가할 것이다. 즉 특수주의가 부패를 촉진할 것이다.

가설2 (H2) :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국가 수준에서의 부패는 감소할 것이다. 즉 투명성은 부패를 줄일 것이다.

이러한 가설의 검증에서 관심은 관계의 방향 못지않게 영향의 크기이다. 또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특수주의와 투명성의 영향이 기존 연구들에서의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의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III. 조사 설계

1. 표본 구성과 데이터의 선택

이 연구에서 분석 단위는 국가이고,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거시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한다. 특수주의와 공공부문 투명성의 국가 부패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데 2차 자료(secondary data)를 이용하였다. 종속 변수인 국가 부패의 수준은 TI의 CPI, 독립 변수 중 특수주의는 Trompenaars (1994)의 UNPA, 민주주의 발전 정도와 투명성 수준은 각각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와 IMD, 국민 1인당 GDP는

World Bank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들 데이터 사용에서 문제는 자료 값 간 작성 연도의 불일치이다. 먼저 특수주의는 1994년 데이터이다. 각국 간 문화적 태도의 차이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사 자체가 어렵다. 나아가 연구자들은 문화는 시간이 흘러도 잘 변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흔히 오랜 시간 경과 후에도 과거 한 번 작성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은경·이정주 (2006)는 OECD 주요 국가별 부패 친화적 연고주의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Hofstede and Hofstede (2005)의 권력거리, 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 지수를 사용, 2005년도 CPI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Hofstede의 문화적 차이 데이터는 1980년대 처음 작성된 것이다. Hofstede (1984)는 70년대 초부터 IBM 데이터를 구축하여 1984년 발표한다. 이후 40개국에서 50개국으로 대상을 확장하다가, Hofstede (2001)에서는 74개국을 분석하였다. Hofstede and Hofstede (2005) 연구도 초기 IBM 데이터의 확장인 74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Hofstede and Hofstede (2005: 70)는 각국 문화의 차이는 수천 년 역사에 뿌리를 둔 것으로 '정적(static)'이라고 말한다. 자신들의 1980, 1990, 2000년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일부 변화만 관찰되었고, 1970년대에서 2000년대에 와도 문화적 차이는 크게 약화되지 않고, 그대로라고 주장한다(Hofstede & Hofstede, 2005: 31, 70-72). Trompenaars (1997: 53-54) 역시 문화란 외부의 도전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반복적 경험을 통해 발전된 것으로, 변화도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더디게 진행된다고 말한다. Husted (1999)나 LaPalombara (1994)도 문화적 지향성의 이와 같은 성격을 지적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나 문화 변수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1994년에 발표된 특수주의 데이터를 사용하되, 데이터 간 수집 연도 차이에 따른 모수 추정에서의 오차를 특수주의의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고자 하였다. 완전 모형(full model)의 분석 외에 특수주의 영향도의 민감도 분석을 위한 확인 모형(censored model) 분석을 추가하였다. 완전 모형은 TI가 발표한 국가 부패 수준 2010년도 CPI를 종속 변수로 하고, 모든 독립 변수를 포함한 것이다. 반면 확인 모형은 종속 변수 CPI는 특수주의와 가장 시차가 적은 1998년 데이터, 즉 조사 대상 국가의 수가 각국 부패 수준에 대한 분석을 할 만큼 충분히 큰 이용 가능한 최초의 CPI를, 독립 변수는 1998년도 GDP, 1994년도 특수주의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다. 2010년 모형 분석의 목적은 특수주의와 공공부문 투명성의 반부패 효과, 그리고 기존 부패 연구에서의 GDP, 민주주의 수준의 효과와의 비교이다. 반면 확인 모형의 목적은 작성 시점이 다른 2차 자료의 사용, 즉 완전 모형에서 2010년 종속변수에 대한 1994년 특수주의 데이터의 영향에 대한 민감도 검토이다. 두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국가 부패 수준 분석 모형 I

$$y_{2010}^{\text{국가 부패 수준 CPI}} = \beta_0 + \beta_1 x_{\text{문화: 1994 특수주의 형태}} + \beta_2 x_{\text{정치: 2010 민주주의 수준}} + \beta_3 x_{\text{경제: 2010 국민 1인당 GDP}} + \beta_4 x_{\text{공공부문: 2010 투명성 수준}}$$

모형 II (1)

$$y_{1998}^{\text{국가 부패 수준 CPI}} = \beta_0 + \beta_1 x_{\text{문화: 1994 특수주의 형태}} + \beta_2 x_{\text{경제: 1998 국민 1인당 GDP}}$$

(2)

$$y_{2010}^{\text{국가 부패 수준 CPI}} = \beta_0 + \beta_1 x_{\text{문화: 1994 특수주의 형태}} + \beta_2 x_{\text{경제: 2010 국민 1인당 GDP}}$$

모형 y2010의 종속 변수는 2010년 CPI, 모형 y1998의 그것은 1998년 CPI이다. 특수주의는 1994년 지수이다. 확인 모형을 사용한 민감도 테스트에서는 분석 결과가 모든 영향의 방향은 일관되어야 하고, 영향 정도의 변화는 매우 적어 추정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해도 독립 변수 영향의 정확한 추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변수의 측정

1) 국가 부패 수준

국가 부패 수준은 TI의 CPI로, 부패 연구에서 비록 일부는 실제 부패 경험과 같은 객관적 부패 지수(objective corruption indicators)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예, Pazmandy, 2011), 대부분은 CPI를 쓴다. CPI는 각국 부패 등급 비교를 목적으로 TI가 Göttingen University 연구팀과 공동으로 개발한 척도로 ‘서베이 조사의 조사(poll of polls)’ 성격을 갖고 있다.¹⁾ 예를 들어, 2010년 CPI는 전세계 178개국 공공부문 부패의 인지된 수준(perceived levels of public sector corruption)으로, 전세계 10개 기관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한 13개 서베이 결과를 원천 자료로 사용해 작성한 합계 지수이다. 원천 자료는 공공부문, 정치 분야 부패의 빈도와 규모 등 그 정도와 각국의 등급 정보를 포함한 것들이다. 원천 자료의 부패 평가는 각국 경쟁력 및 투자위험 분석 전문가(country experts)와 기업 종사자들(business leaders)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1) http://www.transparency.org/about_us. 검색일 2011.9.9. cpi1996.pdf. 참조.

다. 만점은 10점이고, 부패가 전혀 없는(corrupt-free) 상태를 가리킨다. 반면 0점은 비즈니스 거래가 전적으로 뇌물(kickbacks, extortion, bribery, etc.)에 지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²⁾ CPI는 각국 부패의 인지도 수준이나, 전문가 평가와 서베이(expert assessments and opinion surveys) 결과이고,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다.

2) 특수주의

특수주의는 Trompenaars (1994: 18, 287)에 발표된 보편-특수주의(UNPA) 값을 사용하였다. UNPA는 1994년 처음 측정 이후 일부 국가 단위로 2003년, 2010년 계속 부분적 수정 발표가 있었다(Trompenaars, 1994, 2003; Trompenaars & Hampden-Turner, 1998, 2010. 이들은 부록에서 제시된다). Trompenaars (1994)는 50여개 국가에 지사를 둔 30개 회사를 대상으로 지사들이 있는 각 나라별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영국, 네덜란드 1,000명 이상, 35개 국가는 100명 이상, 10개국은 50-100명 등 총 14,993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각국 별 응답이 50개 이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UNPA를 계산하였다. 응답자는 남성 65%, 여성 35%이다. 보편-특수주의 태도 측정에는 세 가지 딜레마(교통사고에 관한 거짓 증언, 형편없는 식당에 관한 거짓 기사 작성, 친구에 내부 정보 누설하기)가 사용되었다(Trompenaars, 1997: 67-76).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딜레마 중 첫 번째 딜레마는 법규 위반에 대한 것으로 부패와 가장 가깝고, 나머지는 딜레마 주제가 갖는 특성이 일부 국가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측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딜레마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딜레마와 UNPA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Trompenaars, 2003: 1-2; Trompenaars, 1997: 68). "친한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데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당신은 도시 내에서는 제한 속도가 시속 30마일인데, 친구가 적어도 45마일로 운전했음을 알고 있다. 다른 어떤 목격자도 없다. 만일 당신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친구가 시속 30마일로 달렸다고 증언하면 친구를 중죄로부터 구할 있다." 질문1. 친구는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친구는 나에게 친구로서 유리하게 증언해 줄 것을 기대할 권리를 (a) 확실히 갖고 있다, (b) 조금 갖고 있다, (c)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질문 2. 당신은 사회에 대하여 갖는 의무감이란 관점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해야 할 의무와 친구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친구가 시속 20마일로 달리고 있었다고 (d) 증언한다, (e) 증언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사에서 UNPA, 즉 특정 관계보다 보편적률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b) 또는 (c) + (e)로, 친구가 그럴 권리가 전혀 없거나 약간 있지만 증언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UNPA는 보편주의자 % 또는 보편주의 수준이고, 특수주의자나 수준은 '100(%) - UNPA'이다.

2) http://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2010/in_detail#4. 검색일 2011.9.9 참조.

3) 투명성

공공부문 투명성 수준은 IMD 자료 중 투명성 지표 값, 즉 정부 정책 투명성에 대한 만족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IMD는 1989년 이래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통해 국가경쟁력 지수를 발표한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 지표는 국가경쟁력 지수 집계 지표 중의 하나이다. IMD 국가경쟁력 지수는 네 가지 분야(Economic Performance, Government Efficiency, Business Efficiency, Infrastructure)인데, 이 중 Government Efficiency는 다섯 가지 분야(Public Finance, Fiscal Policy, Institutional Framework, Business Legislation, Societal Framework)로 이루어지고, 다시 Institutional Framework은 13개 항목에 대한 합계로 측정된다. 투명성 지표는 바로 그 항목 중 하나이다. IMD 공공부문 투명성은 정부 정책 투명성에 대한 만족도 수준으로, 서베이 조사로 측정되며, 만족도의 크기는 1부터 10까지이다. 매년 응답자 5,000명을 대상으로 Executive Opinion Survey를 실시해 자료를 수집한다. WEF도 국제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면서, '정책결정의 투명성' 지표를 작성, 공개한다. 이들은 모두 국가의 부의 창출과 경쟁력이 기업 단위에 의해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각국의 비즈니스 리더들 대상의 서베이 방법에 의하여 투명성 지수를 작성하고 있고, 모두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에 관한 것이란 점에서 특별한 차이는 없다. 이 연구에서 IMD 투명성(transparency) 수준은 '정부가 정책과 규제를 얼마나 일반이 얼마나 명료하게 잘 알도록 하는가?' 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된다. 만족도 크기가 클수록 투명성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확히는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 making)' 만족도 지수이다.³⁾ Zhao, Kim, and Du (2003)도 부패와 투명성이 직접 투자(FDI)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국가 차원의 부패와 투명성 수준에 TI와 IMD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4) 기타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는 EIU와 Freedom House(이하 FH)가 작성, 발표한다. FH도 EIU와 같이 글로벌 서베이를 통해 이를 작성하지만, 민주주의 개념을 선거(elections)로 제한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EIU 지수를 이용하였다. EIU는 2006년 처음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지수로 작성, 공개한 이래 2년 간격으로 수정된 지수를 발표한다. 지수는 다섯 가지 부문, 즉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시민의 자유(civil liberties), 정부의 역할(functioning of government), 정치 참여와 정치 문화(political participation and

3) http://www.imd.org/research/centers/wcc/research_methodology.cfm. 검색일 2011.9.9.참조.

political culture) 분야의 60 질문 항목에 기초해 집계된다. 각 질문 항목에 대한 응답은 1점, 응답자가 3 가지 질문 중 하나에 답을 해야 하는 경우는 0.5점으로, 각 영역별로 합산된다. 각 영역별 점수를 10으로 곱하고, 질문 총수로 나누는데, 개별 국가 민주주의 지수는 5개 영역 지수의 평균이다. 대부분의 질문 항목은 전문가 평가(expert assessments)이고, 일부는 각국으로부터 나온 여론조사(public-opinion surveys)에 기초한 것으로 서베이가 없는 경우는 유사 국가 서베이 결과와 전문가 평가를 사용하여 작성된다. 민주주의 지수 값은 0부터 10까지이다. 민주주의 지수 값이 클수록 그 수준이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 기타 다음 경제 분야의 국민 1인당 GDP는 World Bank, IMF 등 다양한 국제기관들이 통계를 제공하는데, 여기에서는 World Bank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 각각의 투입에 따른 종속 변수인 국가 부패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관찰하고, 각 변수 간의 효과에 대한 비교를 위하여 계층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이미 선행연구들이 민주주의, GDP의 부패 수준에 대한 영향을 여러 차례 검토했던 만큼, 이 두 요인을 먼저 회귀식에 투입하여 결과가 선행연구에서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하고, 다음 이 연구가 가설 설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문화적 차이 변수인 특수주의와 공공부문 투명성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IV. 분석의 결과

1. 표본 국가의 특성

이 연구의 유효 표본은 37개 국가이다. <부록> 참조. 부록의 ‘국가별 부패 관련 주요 변수의 데이터’에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 부패 수준은 우루과이(Uruguay)가 2.6점 높아져 부패가 가장 많이 줄었고, 반면 그리스는 오히려 1.4점이 빠져 오히려 부패가 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지수가 2.1점 증가하여, 분석 대상 국가 중 4번째로 부패 수준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록은 보편-특수주의(UNPA) 데이터만 제공하나, 특수주의는 개념 정의 상 ‘100(%) - 보편-특수주의(UNPA)’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보편-특수주의가 26%라는 것은 보편주의자가 26%로, 특수주의자는 74%라는 뜻이다. 중국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한국보다 낮았지만 보편-특수주의만은 48%로 한국보다 높았다. 이것은 한국의 특수주의 성향이 분석 대상 국가 중 다른 어떤 나라보다

도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민주주의 지수는 한국은 8.11로 일본보다 앞서고, 아시아에서는 분석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IMD가 작성한 공공부문 투명성 지수는 4.43으로 영국의 3.33보다 더 높다.

2. 분석과 검증

1)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초 분석

다음 <표 1>은 주요 변수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적 통계 및 상관분석의 결과로, 평균, 표준편차,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37)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부패 지수 (CPI)		민주 주의	GDP		특수 주의	투명성	
			2010	1998	2010	2010	1998	1994	2010	
부패 지수 (CPI)	2010	6.05	2.50	1.00						
	1998	5.97	2.60	.949***	1.00					
민주주의	2010	7.49	1.64	.720***	.713***	1.00				
GDP	2010	29,198	21,274	.874***	.886***	.733***	1.00			
	1998	15,590	12,180	.894***	.886***	.695***	.947***	1.00		
특수주의	1994	70.81	18.14	.694***	.753***	.663***	.699***	.693***	1.00	
투명성	2010	4.37	1.68	.794***	.758***	.521**	.701***	.660***	.517**	1.00

*p<.05; **p<.01; ***p<.001; 2-tailed tests.

주1: 국가 부패 지수(CPI)는 값이 클수록 공직자들이 청렴한 국가를 의미한다.

주2: 민주주의는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지수이다. 국민 1인당 GDP 평균 및 표준편차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였다.

주3: 특수주의는 부록에서 보편-특수주의(UNPA)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즉 보편주의 (%)이다. 하지만 실제 특수주의 %는 '100 - 보편주의 %'이다.

대부분의 변수들은 상호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변수 간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가리킨다. 분석 대상 국가의 평균 부패 지수 CPI 값은 1998년 5.97, 2010년 6.05로, 비교적 높았다. 2010년 178개국 조사 CPI를 기준으로 이들을 해석하면, 분석 표본의 CPI 평균값은 30위 스페인의 6.1과 32위 포르투갈의 6.0과의 사이이다. 한국은 5.4점으로 39위였다. 이로 미루어 표본의 2010 CPI 평균값은 TI 조사 전체 국가 CPI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전체 조사 대상 국가에 비해 분석 표본은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나라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되었음을 가리킨다. 분석 결과, 먼저 부패 수준과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가 긍정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998과 2010년 각각 $r=.713$, $p<.001$; $r=.720$, $p<.001$). 민주주의가 보다 발달한 국가일수록 공공부문을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패가 정치적 책임성을 약화시킨다는 일반적 믿음을 지지한다(Aidt, 2009). 예를 들어, TI는 부패와 민주주의 관계에 대하여 “부패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democracy and the rule of law)를 손상시킨다”는 입장을 표방하는 바⁴⁾, 분석 결과는 이러한 관계 인식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국가 부패 수준 CPI는 GDP와도 고도의 긍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강철규·이재형 (2010: 81)의 “한국의 경우 1인당 실질 소득의 증가율과 반부패 지수의 증가율은 안정적인 정의 관계”라는 발견과 일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국민 1인당 GDP간의 관계 역시 긍정적이고, 그 정도도 상당히 높다(1998과 2010년 각각 $r=.695$, $p<.001$; $r=.733$, $p<.001$). 부패 지수 CPI(1998, 2010)와 특수주의 및 투명성과의 관계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변수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의심케 한다. 이에 따라 다중공선성 테스트 결과 가장 문제의 여지가 있었던, 2010 GDP는 공차한계(tolerance)가 .284로 낮았으나, VIF(variance inflation)는 3.520으로 10보다 훨씬 낮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가설의 검증

다음 <표 2>은 2010년 기준, 모든 변수를 포함한 완전 모형(full model)의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이를 통해 각 독립 변수별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영향과 이들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2> 국가 부패 수준 분석 모형 1의 분석 결과 (N=37)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부패 지수 ₂₀₁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Beta ^{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Constant	-2.509		-1.602	2.001		1.633	1.578		1.260	.286		.252
민주주의 ₂₀₁₀	1.138	.700	5.626***	.160	.098	.810	.033	.020	.151	.038	.024	.206
GDP ₂₀₁₀				.000	.813	6.714***	.000	.747	5.769***	.000	.515	3.983***
특수주의 ₁₉₉₄							.023	.171	1.325	.021	.161	1.453
투명성 ₂₀₁₀										.499	.337	3.486**
F Value	31.652***			59.507***			41.195***			45.047***		
Adjusted R ²	.474			.775			.780			.838		

a) Beta는 standardized coefficients이다.

* $p<.05$; ** $p<.01$; *** $p<.001$; 2-tailed tests.

주1: 국가 부패 수준은 2010년 TI CPI, 즉 부패인식 지수이다. 특수주의(100 - UNPA %)는 1994년, 나머지 민주주의 지수, GDP, 투명성은 2010년 데이터이다. 민주주의는 EIU의 democracy index 2010이다. 원자료(raw data)는 <부록>을 참조.

주2: EIU 대신 FH의 electoral democracy 지수를 사용했을 때, 계층별 회귀분석 4 단계 모두 $p<.001$ 에서 유의하고, Adjusted R square는 각각 .510, .512, .780, .843이었다.

주3: 4단계 분석에서 N=35이다.

4) http://www.transparency.org/about_us. 검색일 2011.9.9.

계층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 민주주의 발달 수준은 국가 부패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b=1.138$, $p<.001$), Adjusted R2는 .474로 설명력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단계에서 국민 1인당 GDP를 설명 변수로 추가하자, 민주주의 지수의 영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국민 1인당 GDP의 부패 지수에 대한 기여는 긍정적으로 유의한 것이었고($b=.000$, $p<.001$), Adjusted R2도 .775로 크게 늘었다. 특히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GDP의 기여는 Beta 값이 .813으로 민주주의 수준의 .098에 비해 훨씬 큰 것이었다. 민주주의 발달이 1차 회귀에서 보여주었던 부패 수준에 대한 기여를 GDP가 사실상 거의 대체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GDP 수준도 높은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3단계 분석에서는 특수주의 태도를 설명 변수로 추가하였고, Adjusted R2는 다시 .780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여기서 눈에 띄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특수주의의 영향이 크거나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b=.023$, $p>.05$). 또 하나는 이로써 독립 변수의 설명력을 추가적으로 크게 증가시키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Trompenaars (1997: 53)는 “문화는 우리의 행동을 지시한다”고 하고, 특수주의의 폐해가 부패라고 말했으나 분석 결과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투명성을 설명 변수로 추가한 결과,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기여는 긍정적이고 유의하였다($b=.499$, $p<.01$). Adjusted R2도 .838까지 증가하였다. 그 뜻을 해석하면, 공공부문이 투명할수록 국가의 부패 수준은 개선된다는 의미이다. 완전 모형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국가 부패 수준에 민주주의와 특수주의는 유의한 영향 요인이 아니다. Beta 값의 크기로 보면 국가 부패 수준을 개선하는데 국민 1인당 GDP, 공공부문의 투명성의 순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나, 특수주의, 민주주의 영향은 그렇지 못했음을 가리킨다. 이것은 가설1의 기각을 의미한다. 즉 특수주의가 국가 차원에서의 부패 증가에 유의한 영향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분석 결과는 공공부문의 높은 투명성이 국가 차원의 부패 수준을 개선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한다. 영향의 크기도 GDP 다음으로 큰 것이었다. 독립 변수의 설명력의 크기 외에 이 연구에서 또 다른 관심은 이전 부패 연구들이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주요 영향 변수로 다루어왔던 GDP와 민주주의 수준의 영향을 특수주의, 공공부문 투명성의 그것과 비교해 보는 것이었는데, 민주주의, 특수주의의 영향을 유의하지 않았고, GDP의 효과는 투명성의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확인 모형 분석

확인 모형 분석에서 관심은 1994년 특수주의의 1998년과 2010년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영향의 차이이다. 다음 <표 3>은 분석 결과이다.

<표 3> 모형 2의 분석 결과 (N=37)

독립 변수	2010년						독립 변수	1998년					
	종속 변수: 부패 지수 ₂₀₁₀							종속 변수: 부패 지수 ₁₉₉₈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	Be	T	B	Be	T		B	Be	T	B	Be	T
Constant	3.055		8.807***	1.854		2.062*	Constant	3.018		9.170***	.923		1.096
GDP ₂₀₁₀	.000	.874	10.637***	.000	.760	6.717***	GDP ₁₉₉₈	.000	.886	11.305***	.000	.701	6.989***
특수주의 ₁₉₉₄				.022	.163	1.443	특수주의 ₁₉₉₄				.038	.267	2.666*
F Value	113.148***			59.366***			F Value	127.801***			78.599***		
Adjusted R ²	.757			.764			Adjusted R ²	.779			.812		

*p<.05; **p<.01; ***p<.001; 2-tailed tests.

주: Be=Beta 값이다.

먼저 2010년과 1998년 두 모형에서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GDP의 기여가 어떻게 다른가를 Adjusted R2라는 점에서 보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1998년 모형에서 GDP의 설명력은 Adjusted R2 = .779였으나 2010년에는 .757로 .024 작다. 이것은 GDP의 경우, 국가 부패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두 시점 간에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특수주의의 영향을 보면, 1998년 모형에서는 1994년 특수주의가 1998년 국가 부패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2010년 모형에서는 1994년 특수주의의 2010년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을 계층적 회귀 분석 2단계 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1994년 특수주의의 1998년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Be=.267에서 2010년에는 .163로 감소하였고 더 이상 유의하지 않다. GDP는 두 시점 간에 영향력이 일관되게 관찰되었으나, 특수주의의 그것은 2010년과 1998년 모형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1994년 특수주의의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영향이 1998년과 2010년 사이에 다르고, 그 영향의 크기가 줄고 있음을 시사한다. ‘데이터가 오래된 것이어서, 즉 2010년도 문화적 차이를 측정할 것이 아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확인 모형을 사용해 독립 변수 영향력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할 경우, 추정치는 변화가 적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분석 결과 독립 변수 영향의 방향은 그대로이다. 하지만 특수주의 영향이 1998년 모형에서는 유의했으나 2010년 모형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특수주의 1994년 데이터를 2010년 모형에 사용할 경우 모수 추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수주의의 영향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여 결과 해석 시 고려되었다.

3. 요약과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 공공분야를 대표하는 각각의 부패 관련 요인을 독립 변수로 설정, 이들 거시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문화 변수 특수주의와 공공부문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분석 결과 특수주의 부패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공공부문의 투명성은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영향에서 국민 1인당 GDP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주의 수준의 부패 효과는 이전 연구와 달리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특수주의는 그 동안 부패를 유발하는 강력한 원인이라는 혐의를 받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Trompenaars (2003: 3)는 뇌물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자체가 딜레마이고, 어떻게 이를 다루는가는 바로 문화적 태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문화적 태도 중 특수주의의 병폐로 부패 유발 효과를 지적하였다. 조은경·이정주 (2006: 491)도 자신들의 연구에서 연고주의가 부패 축진의 주요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수주의가 연고주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분석 결과는 이들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두 가지 정도가 될 것이다. 하나는 연고주의는 실제 국가 부패 수준에 유의한 영향 변수가 아니고, 연구 결과도 그것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선행연구들의 지적대로 연고주의가 강력한 부패 유발 문화 변수이나 이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특수주의=연고주의’가 아니고, ‘특수주의≠연고주의’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현재 후자의 가능성을 거부할 어떤 객관적 증거는 없다. 하지만 분석 결과를 놓고 보면, 우선 특수주의는 일단 국가 차원의 부패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적어도 다른 독립 변수들의 그것과 비교해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특수주의와 연고주의가 어느 정도나 같은 것인지는 또 다른 연구에 의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문화적 태도는 그 영향이 확인되더라도 정책적 간섭에 의한 인위적 변화가 어렵다. 또 글로벌 사회의 진전으로 각국 간 문화적 태도, 인식 등의 영향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문화적 차이란 특정 지역 구성원 간의 오래 시간에 걸친 사회화 과정, 즉 경험 공유, 학습 등에 의한 축적과 세대를 통한 전승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잘 소멸되지 않는 지속성, 안정성을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크게 늘고 특정 국가의 사회 규범과 다른 사회의 그것간의 충돌도 빈번해지고, 긴장도 그 만큼 높아지고 있다. 개별 국가의 문화적 차이의 온존과 지속의 가능성은 오히려 줄고, 특정 국가 과거의 규범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문화적 차이의 부패 영향의 축소를 시사한다.

둘째, 공공부문 투명성의 국가 부패 수준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의 부패 수준 개선 효과는 GDP 다음으로 강력하였다. 이것은 각국의 공공부문 투명성 개선을 통한 국가 부패 수준 개선 전략이 유효한 접근임을 보여준다. 국민권익위원

회 (2011: 318, 322, 325-326)는 외부 청렴도 측정 설문에서 부패 외에 투명성 지수 항목을 두고 있고, 내부 청렴도 측정에서도 청렴 문화 세부 항목으로 '간부 및 일반 직원들의 업무 추진 공정성 투명성 정도'를 측정한다. 또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정책 투명성 진단 노력을 평가의 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이러한 정부의 공공부문 투명성 개선 전략이 국가 부패 수준을 개선하는데 유효한 정책 선택임을 가리킨다.

셋째, 기존 연구들과 비교할 때, GDP의 영향은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부패 수준 개선에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발달 수준의 영향은 이전과 달리 유의하지 않았다. 먼저 연구자들은 GDP와 부패의 영향 관계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설명한다는 점이다. 강철규·이재형 (2010: 82)은 68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거시 변수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면서, 부패가 정부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의 왜곡, 결과적 자원 낭비 등으로 합리적 투자를 방해하여 결국 경제발전 장애로 기능한다는 연구자들(예, Aidt, 2009)의 지적을 근거 논리로 제시하면서, 부패를 줄이면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반대로 GDP가 국가 부패 수준에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갖는가를 검증하면서, 그 이유를 부패 행동은 주로 국민들의 기초적이고 낮은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다. 국민 소득이 높아질 때 개인은 생존이나 의식주 욕구로부터 해방되고 보다 상위 단계 욕구로 이동하여, 부패 유혹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또 국가는 GDP가 높아지면 적극적인 부패 통제를 위한 사회 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 분석 결과는 GDP가 국가 부패 수준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으나, 연구는 애초 인과 관계의 특정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전의 일부 부패 연구자들의 부패가 원인이고 GDP가 결과라는 반대 방향의 해석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 원인과 결과의 상호적 관계(reciprocal cause/effect relationships)가 될 것이다. 다음 과거 연구들과 달리 민주주의의 수준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발달 수준만 보면 부패 수준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GDP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자, 민주주의와 GDP 간의 높은 상관관계 때문에, GDP가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민주주의 영향을 대체하면서 민주주의 효과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수준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이전 연구와 차이점이라는 점에서 둘 간의 관계와 각각의 순수 효과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 사용에 따른 시사점이다. 이 연구는 2차 자료에 기초한 만큼 분석 결과 역시 데이터의 성격과 질에 크게 의존적이다. 따라서 데이터 성격이 분석 결과에 미쳤을지도 모를 영향의 가능성 검토는 중요하다. 먼저 특수주의를 연고주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보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특수주의가 곧 연고주의 그 자체는 아닐 것이다. 다음 대부분 변수들의 데이터는 대상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타당성이 높으나, 대상 또는 인식의 주체, 작성 시점 등에서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각국 부패 수준과 투명성은 공공부문에 대한 것인 반면 GDP, 민주주의 수준은 전체 국가, 특수주의는 기업 종사자 개인의 생각에 관한 것이었다. Trompenaars (1994)의 보편-특수주의 %는 각국 기업 CEO들의 주관적 판단에 관한 데이터이고, 측정 방법도 달랐다. 데이터의 이러한 수집 방법상의 차이는 독립 변수들의 영향이 부정확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Hofstede (1984)가 전 세계 7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문화 차이 연구는 IBM(과거 Hermes) 직원들 대상의, 즉 특정 기업 대상의 서베이 데이터라는 비판을 받았다 (Hofstede & Hofstede, 2005). 특수주의는 이 보다는 낮지만 일부 기업 종사자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나아가 Trompenaars (1997)의 보편-특수주의 조사에서 응답자는 관리자 75%, 일반 사무직 25%이고, 지역별 분포는 북미 5.0%, 남미 4.7%, 유럽 57.3%, 아프리카 4.5%,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1.8%, 아시아 7.0%, 기타(중부 유럽, 카리브해 연안 등) 19.6%이었다. Thomsen (2003)은 Trompenaars (1997)의 보편-특수주의 딜레마를 이용하여 덴마크 군대 연락장교(linguistic liaison officers of the Danish armed forces), 일반 장교, 그리고 학생, 세 그룹 간의 문화적 태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보편-특수주의 데이터는 기업 종사자, 주로 유럽 출신이 참여한 조사를 통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태도가 과도하게 대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밖에 GDP는 객관적 데이터이나 나머지는 서베이 방법을 통해 획득된 질적 데이터들이었다. 데이터의 이러한 조사 대상과 방법, 성격 등은 분석 결과를 편향시켰을 수 있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특수주의와 투명성의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 문화가 부패 친화적 사회문화 환경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조은경·이정주, 2006: 491),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부족한 이해를 보충한다. 또 부패 연구에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문화적 차이나 공공부문 투명성 변수의 영향력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부패 연구의 관심 대상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반면 분석에 사용된 2차 데이터들은 결과의 해석을 제한한다. 첫째, 특수주의와 다른 변수들과의 데이터 작성 연도상의 불일치이다. 비록 민감도 분석을 통해 영향력 크기에 대한 해석의 오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 결과의 해석에 반영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특수주의 데이터는 유럽 국가들을 과도 대표하는 것으로, 국가 부패 수준에 대한 독립 변수들의 영향을 왜곡 또는 과소 추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부패 수준, 공공부문 투명성 등의 자료는 응답자 인식에 따른 것으로 주관적이다. 인

식 지수는 현실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Pazmandy (2011: 52)가 지적하듯, 많은 연구들이 부패 지수를 실제 부패 수준이 그런 것처럼 사용하지만, 부패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한계가 될 것이다. 셋째, TI CPI나 투명성 지수는 공공 부문에 대한 것이다. 문화적 변수로서의 특수주의는 기업 종사자 대상의 조사 결과이었다. CPI, 특수주의, 투명성은 인식 지수, 즉 주관적인 것이나 국민 1인당 GDP는 객관적 데이터이다. 데이터의 이러한 성격 차이는 독립 변수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방해하였을 수 있는 것들이다. 또 연구자들(이상환, 2004: 150-152; Ko & Samajdar, 2010)은 TI CPI가 갖는 부패 지수로서의 문제점을 이미 여러 가지로 지적해 왔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여기에서도 유효한 것들이다. 기타 표본 요소 국가는 37개였다. 따라서 분석 결과가 글로벌 사회 전체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분석 결과의 정확한 해석과 일반화를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다. 비록 대부분이 2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 거시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한 분석에서 좀처럼 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분석 결과의 해석과 활용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철규·이재형 (2010). 경제발전과 사회적 기술: 반부패와 IT의 성장수렴 효과 비교 분석. 「경상논총」, 28(2): 81-101.
- 국민권익위원회 (2011). 「2010 국민권익백서」.
- 권오성 (2005). 한국 부패의 사회 문화적 원인에 관한 연구. 엄구호 (편). 「동북아 국가의 부패: 문화, 구조, 정책」 (서울: 역락), pp.115-146.
- 이상환 (2004). 국제적 부패 관련 경험적 연구의 한계와 개선 방안: 부패 지수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2(1): 139-163.
- 이종한 (1994). 연고주의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1(1): 83-94.
- 이훈구 (2003). 「연고주의」. 서울: 법문사.
- 전수일 (2004). 한국의 부패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9(2): 179-199.
- 조은경·이정주 (2006). 부패 친화적 연고주의 문화의 국가별 비교 분석. 「한국행정학보」, 40(4): 491-509.
- 한국행정학회 (1999). 「부패유발 사회문화 환경개선」. 국무조정실 연구용역보고서.
- 한승완 (2004). 연줄망에서 연결망으로 - 한·중·일 3국의 연고주의 유형 비교. 「사회와 철학」, 8: 97-121.
- 황진영·강동관 (2007). 국가별 특성에 의한 부패와 성장 간의 관련성 검토. 「비교경제연구」, 14(1): 1-39.
- Aidt, T.S. (2009). Corruption, institu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Oxford Review Economic Policy*, 25(2): 271-291.
- Andersen, T.B., Bentzen, J., Dalgaard, C.J., & Selaya, P. (2011). Does the internet reduce corruption? Evidence from U.S. states and across countries. *World Bank Economy Review*. doi:10.1093/wber/lhr025.
- Arikan, G.G. (2008). How privatizations affect the level of perceived corruption. *Public Finance Review*, 36(6): 706-727.
- Brown, S.F., & Shackman, J. (2007). Corruption and related socioeconomic factors: A time series study. *Kyklos*, 60(3): 319-347.
- De La Croix, D., & Delavallade, C. (2011). Democracy, rule of law, corruption incentives, and growth.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13(2): 155-187.
- de Vaal, A., & Ebben, W. (2011). Institutions and the 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15(1): 108-123.
- Getz, K.A., & Volkema, R.J. (2001). Culture, perceived corruption, and economics: A model of predictors and outcomes. *Business & Society*, 40(1): 7-30.
- Gupta, S., Davoodi, H., & Alonso-Terme, R. (2002). Does corruption affect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Economics of Governance*, 3(1): 23-45.
- Hill, K.Q. (2003). Democratization and corruption: Systematic evidence from the

- American states. *American Politics Research*, 31(6): 613–631.
- Hofstede, G. (1984).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ofstede, G., & Hofstede, G.J. (2005).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2nd ed.). New York: McGraw-Hill.
- Huss, R., Green, A., Sudarshan, H., Karpagam, S.S., Ramani, K.V., Tomson, G., & Gerein, N. (2010). Good governance and corruption in the health sector: Lessons from the Karnataka experience. *Health Policy Plan*, doi:10.1093/heapol/czq080.
- Husted, B.W. (1999). Wealth, culture, and corrup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0(2): 339–360.
-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2010).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Lausanne, Switzerland.
- Kim, S., Kim, H.J., & Lee, H. (2009).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an e-government system for anti-corruption: The case of OPEN.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6(1): 42–50.
- Ko, K., & Samajdar, A. (2010). Evaluation of international corruption indexes: Should we believe them or not? *Social Science Journal*, 47(3): 508–540.
- Kovacic, Z.J. (2005). A brave new e-world? An exploratory analysis of worldwide e-government readiness, level of democracy, corruption and glob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Government Research*, 1(3): 15–32.
- LaPalombara, J. (1994).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corruption. *Social Research*, 61(2): 325–350.
- Lindstedt, C., & Naurin, D. (2010). Transparency is not enough: Making transparency effective in reducing corruptio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1(3): 301–322.
- Mauro, P. (1995). Corruption and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681–712.
- Mauro, P. (1998). Corruption and the composi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9(2): 263–279.
- Pazmandy, M. (2011). Socio-economic influences on corruption perception – Empirical evidence from 27 European countries. *Hamburg Review of Social Sciences*, 5(3): 52–80.
- Shen, C., & Williamson, J.B. (2005). Corruption, democracy, economic freedom, and state strength: A cross-nation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 Sociology*, 46(4): 327-345.
- Steinrain, A. (2011). Tracing transparency. *Government Executive*, 43(1): 24-29.
- Thomsen, P.K. (2003).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wo segments of Danish military personnel and one civilian*. Copenhagen, Denmark.
- Trompenaars, F. (1994). *Riding the waves of culture: Understanding diversity in global business*. Burr Ridge, IL: Irwin Professional.
- Trompenaars, F. (1997). 「문화와 세계경영」, 이현우(감역). 서울: 21세기 북스; *Riding the waves of culture: Understanding diversity in global business* (Burr Ridge, IL: Irwin Professional, 1994).
- Trompenaars, F. (2003). *Did the pedestrian die? Insights from the world's greatest culture guru*. Oxford, UK: Capstone.
- Trompenaars, F., & Hampden-Turner, C. (1998). *Riding the waves of culture: Understanding diversity in global business* (2n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 Trompenaars, F., & Hampden-Turner, C. (2010). *Riding the waves of innovation: Harness the power of global culture to drive creativity and growth*. New York: McGraw-Hill.
- Zhao, J.H., Kim, S.H., & Du, J. (2003). Corruption, transparency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cross-country analysi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43(1): 41-63.

<부록> 국가별 부패 관련 주요 변수의 데이터 (1)

구 분	국가 부패 수준 CPI		문화 보편-특수주의 UNPA			공공부문 투명성 지수	정치 민주주의 수준	경제 국민 1인당 GDP(\$)		
	2010	1998	1994	2003	2008	2010	2010	2010	1998	
	1	Austria	7.9	7.5	80			5.45	8.49	44,879
2	Australia	8.7	8.7	91			5.80	9.22	55,590	21,443
3	Belgium	7.1	5.4	72			3.94	8.05	43,019	25,019
4	Brazil	3.7	4.0	72			3.15	7.12	10,710	4,981
5	Bulgaria	3.6	2.9	56			3.76	6.84	6,310	1,582
6	Canada	8.9	9.2	96		93	5.38	9.08	46,060	20,390
7	China	3.5	3.5	48	35	47	3.27	3.14	4,393	821
8	Czech Republic	4.6	4.8	82			2.97	8.19	18,239	6,008
9	Denmark	9.3	10.0	87			6.75	9.52	55,778	32,759
10	Finland	9.2	9.6	86			6.99	9.19	44,531	25,164
11	France	6.8	6.7	68		73	4.94	7.77	39,460	24,416
12	Germany	7.9	7.9	91		87	5.25	8.38	40,542	26,625
13	Greece	3.5	4.9	58			2.86	7.92	26,910	12,599
14	Hong Kong	8.4	7.8	56			4.82	5.92	31,877	25,507
15	India	3.3	2.9	59		54	3.64	7.28	1,477	423
16	Indonesia	2.8	2.0	47		57	4.58	6.53	3,039	478
17	Ireland	8.0	8.2	90		92	4.59	8.79	45,805	23,703
18	Japan	7.8	5.8	67		68	4.45	8.08	43,161	30,512
19	Malaysia	4.4	5.3	55			5.98	6.19	8,519	3,249
20	Mexico	3.1	3.3	61			2.09	6.93	9,580	4,422
21	Netherlands	8.8	9.0	88		90	5.26	8.99	47,130	25,650
22	Nigeria	2.4	1.9	72			NA	3.47	1,224	270
23	Norway	8.6	9.0	93			6.90	9.80	84,880	34,102
24	Philippines	2.4	3.3	69			1.65	6.12	2,132	968
25	Poland	5.3	4.6	74			3.42	7.05	12,274	4,472
26	Portugal	6.0	6.5	68			2.53	8.02	21,476	12,100
27	Russia	2.1	2.4	42		44	2.34	4.26	10,440	1,845
28	Singapore	9.3	9.1	67		69	7.59	5.89	43,324	20,982
29	South Korea	5.4	4.2	26			4.43	8.11	20,757	7,463
30	Spain	6.1	6.1	65			2.70	8.16	30,452	15,126
31	Sweden	9.2	9.5	93		92	6.93	9.50	48,754	28,776
32	Switzerland	8.7	8.9	94	93	97	6.29	9.09	67,236	38,345
33	Thailand	3.5	3.0	63			3.70	6.55	4,679	1,822
34	United Kingdom	7.6	8.7	90		91	3.33	8.16	36,084	24,894
35	Uruguay	6.9	4.3	65			NA	8.10	11,996	7,754

<부록> 국가별 부패 관련 주요 변수의 데이터 (II)

구 분	국가 부패 수준 CPI		문화 보편-특수주의UN PA			공공부문 투명성 지수	정치 민주주의 수준	경제 국민 1 인당 GDP(\$)	
	2010	1998	1994	2003	2010	2010	2010	2010	1998
	36 USA	7.1	7.5	95	93	93	4.46	8.18	47,084
37 Venezuela	2.0	2.3	34	35	32	0.61	5.18	10,520	3,901

주1: 국가 부패 수준 CPI: TI의 1998년, 2010년 부패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이다. TI는 1996년 이래 매년 CPI를 발표해 오고 있으나, 초기는 조사 대상 국가 수가 적어, 1998년 발표(113개국 조사)부터 이용하였다. 2010년 지수는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의 결과이다. ht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gcb. 검색일 2011.9.9. 참조.

주2: 문화: 보편-특수주의(UNPA) 단위는 %이다. 특수주의는 '100 - UNPA'이다.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 상 그대로 두고 결과만 특수주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1994년 지수는 Trompenaars, F. (1997). 「문화와 세계경영」, 이현우(감역). 서울: 21세기 북스; Riding the waves of culture: Understanding diversity in global business (Burr Ridge, IL: Irwin Professional, 1994), p.69 참조. 여기서 Germany 지수는 서독의 것이고, 동독은 70이다. 2003년 지수는 Trompenaars, F. (2003). Did the pedestrian die? Insights from the world's greatest culture guru. Oxford, UK: Capstone, p.2; 2010년 지수는 Trompenaars, F., & Hampden-Turner, C. (2010). Riding the waves of innovation: Harness the power of global culture to drive creativity and growth. New York : McGraw-Hill, p.113 참조. 2003, 2010년 지수는 일부 국가 자료 추가 수집에 따른 변화만 반영한 것이다.

주3: 공공부문: 투명성 지수.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2010).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Lausanne, Switzerland, p.356 참조. IMD 투명성 지수는 총 58개국에 대한 것으로 Nigeria, Uruguay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4: 정치: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의 2010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이다. http://www.economist.com/media/pdf/DEMOCRACY_TABLE_2010_v3.pdf. 검색일 2011.9.14. 참조.

주5: 경제: 국민 1인당 GDP(per capita GDP) (current US\$)이다. 1998년, 2010년도 모두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Global Development Finance 자료이다. <http://worldbank.org/data=percapitagdp&language=EN>. 검색일 2011.9.14. 참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되었다.

투고일자 : 2011.10.26

게재일자 : 2011.12.16